

에너지자원 위기대응 TF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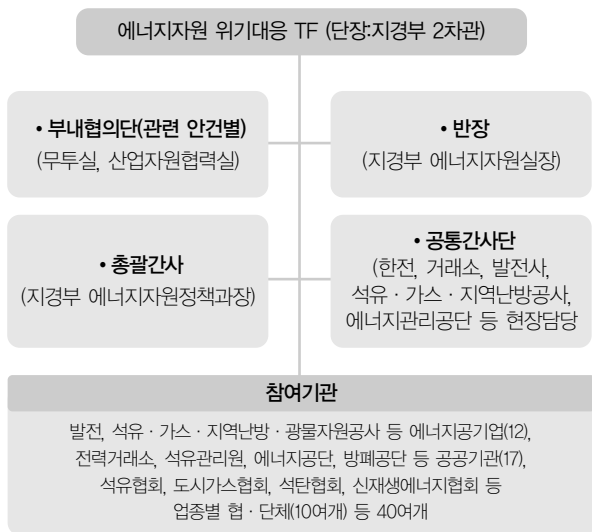
• 40개 기관 참여... 유사시 비축 등유 방출 검토

정부가 올 겨울 에너지 대란을 막기 위해 40개 에너지 기관이 참여하는 '에너지자원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19일 조석 지경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위기 대응 TF는 이날 첫 번째 회의를 시작했다. 전력을 포함한 동절기 석유·가스·석탄 등 원별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에는 국내 29개 에너지 공공기관과 10여 개 주요 업종별 단체, 4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전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총 7개 기관이 공동 간사를 맡는다.

에너지자원 위기대응 TF 구성도



당장 위기대응TF는 동절기 난방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정유사의 난방유 생산 계획을 점검하고 유사시 비축 등유(248만 배럴, 동절기 기준 21일분)의 방출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에도 일단은 2월 말 까지 재고가 충분한 상황임에도 이상기온, 전력 수요 급증 등에 대비해 일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10% 강제 절전 의무, 중소기업은 5%로 완화

• 정유·석유화학·섬유·제지 등 24시간 가동해야하는 업체도

올겨울 '10% 강제 절전' 의무가 부과된 1만4000개 공장·빌딩 중에서 8000개 중소기업체는 '5% 절전'으로 의무가 완화된다. 또 정유·석유화학·섬유·제지 등 24시간 공장 가동이 불가피한 업체도 5%만 절전하면 된다.

지식경제부는 올겨울 전력난에 대비해 전력을 많이 쓰는 1만4000개 공장·빌딩에 대해 일률적으로 전력 최대 사용 시간(오전 10~12시, 오후 5~7시)에 작년보다 10% 절전하도록 했다. 하지만 산업체 반발이 거세자 지난달 23일 업종별로 절전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중에서 장비·소재·부분품 등 250개사는 10% 절전 의무를 유지했고, 24시간 연속 공장을 돌려야 하는 소자·웨이퍼·마스크 등 20여 업체는

비제조 시설에서 10%를 절감하도록 했다. 주물 업종은 1월 둘째~셋째 주 사이에 90개 업체를 10개 조로 나눠 9개 업체씩 휴무하기로 했다. 면방 업종은 평소 5%를 감축하고, 겨울철 전력 사용이 가장 많은 시기인 1월 둘째~셋째 주에는 10%를 줄이도록 했다.

또 사업장을 여러 곳 보유한 기업은 절전 여력이 있는 사업장이 더 절전해 공동으로 10%를 절감하도록 했다.

전력 블랙아웃 걱정 없도록 1조 7000억 원 들여 설비 교체

전력 송배전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데 내년에 정부 예산 1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전력 전문가 4400명이 투입돼 한국전력 등 전국 232만개 전력설비를 전면 재점검한다. 최근 글로벌 원자재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수급 안정을 위해 석유와 철광석 등 16개 원자재를 대상으로 상시경보 시스템(WACS)이 구축



되고 실물경제 급랭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TF가 운영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5일 새해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수출과 생산, 설비투자가 급격한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실물경제·에너지 리스크 대응을 핵심 업무 계획으로 설정했다. 신성장산업 지원이나 통상 확대전략 등 미래 성장에 초점을 맞췄던 올해 전략과 달리 내년에는 불황 방어에 더 무게를 둔 것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새해 전국 전선로 3294km 분량을 총 점검하고, 과거 금 모으기와 같은 개념의 전기 모으기 운동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 모으기 운동을 통해 지경부는 원자력발전소 2.5기 발전량에 해당하는 약 2조 1470억 원 규모 전력 수요를 감축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예비력 500만kW 이상 유지해 동계 전력난 막는다”

정부가 전력예비율을 500만kW 이상을 유지해 겨울철 전력난을 막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5일 홍석우 장관 주제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수급 비상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계 전력 수급 대책을 내놓았다.

회의에서는 전력수요 감축방안, 전국 발전소 전력계통 설비에 대한 집중조사 및 제도 감사를 통한 전력공급 차질 방지 대책,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홍보대책 등이 논의됐다.

우선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이번주 금요일까지 대규모 사용자 대상 긴급 수요 감축, 절전 규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등을 통해 200만kW의 예비력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전은 이날 예비전력이 500만kW를 밑돌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000여개 기업에 총200만kW의 수요절감을 요청했다. 계약전력 1000kW 이상 사용자 1만 4000여 개소에 대한 절전규제도 본격 시행해 오전, 오후 피크시간동안 전력사용량을 전년대비 10% 감축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3만 2000여 개소에 전력수급 상황 등을 안내하는 전력 수급시계를 설치해 전력수요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실내온도 20도 넘으면 과태료 '300만원'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2월 29일까지 겨울철 전력 비상 수급 기간에 실시하는 '난방온도 20도 제한', '네온사인 사용금지'와 같은 에너지 사용 제한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에너지사용 제한 위반 시설은 1회까진 경고장을 발부하고, 2회 위반부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첫날인 지난달 15일엔 서울 명동과 강남역 등 20개 지역에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 관할구청 등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변화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 활동을 펼쳤다.

현재는 지자체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하고, 지경부 차원에서도 주간 단위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력 수급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1월 2주~3주간은 총리실과 행안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KEA